

강원건설 침체 부추기는 정부

접경지역 분포가 높아 군부대 관련 공사의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에 국방부가 대형건설사에 유리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

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공포, 이달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에 근거해 시행사를 선정한다.

국방부가 내놓은 종합심제 세부 심사 기준은 △시공능력 15점△시공실적

국방부 중소·영세업체 불리 중심제 도입 도내업체 경영난 가중·보완책 마련 시급

15점△동일공종 전문성 5점△배치기술자 10점△시공평가 점수 15점△규모별 시공역량 3점△공동수급체 2점으로 구성됐다.

도내 건설업체들은 이번 국방부의 중심제 세부 기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세부 기준은 조달

청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대형건설사에 유리한 반면 강원도를 포함한 중소·영세 건설업체에는 불리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는 시공능력과 실적, 배치기술자 등의 점수가 높아 대형건설사에 유리한 반면 공동수급체 점수는 낮아 도내 업체들의 공사 참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들어 도내 군 관련 시설 공사들이 지역제한이 아닌 전국 입찰로 확대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 수주가 감소하고 있다.

원주의 A 건설업체 대표는 "최근 접경지역에서 발주된 군시설 공사들이 전국 입찰로 풀리고 있다"며 "중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특수성이 고려된 지역업체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강원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와 도 건설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가 확보한 국비 6조715억원 가운데 SOC 예산은 절반가량인 3조1720억원이며 올해 국비 예산 6조3028억원 가운데 SOC 예산은 3조2643억원 규모다.

강원도 전체 예산 중 SOC 예산 비중이 큰 만큼 경제 회복 효과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강원경제 건설활성화로 극복”

춘천~속초 고속철 등 주요SOC 유치 관건

도내 주요 SOC 예산 확보가 강원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강원도 현안 중 최장기 공약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를 비롯해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중앙선(원주~제천)전철, 동해항 3단계 개발과 삼척~제천 간

동서고속도로 등 각종 SOC 사업들이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다.

결국 그 역할은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몫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도내 건설업체와 단체들은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주요 SOC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도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를 일부 업체들만 가져가는 등 실제 혜택이 없었던 만큼 주요 SOC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길 기대하고 있다.

오인철 도 건설협회장은 "올림픽 특수가 끝난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SOC 사업들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안은복